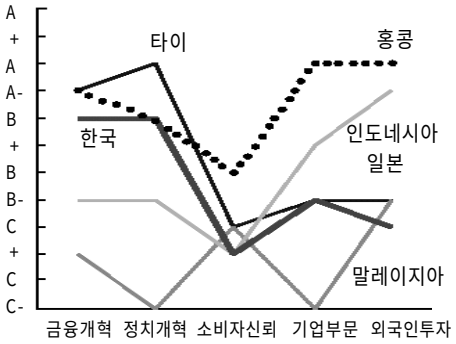
개혁 '98 : 화학경영을 혁신하자! …

경기부양책 VS 경제성적표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정부 일각에서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IMF체제 이후 1년만에 금리인하, 환율안정, 외국인 주식투자 확대 등 경제여건이 호전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경제운용 기조를 「구조조정과 경기부양 병행추진」에서 「경제부양」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경부가 98년 중반부터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다.

재경부의 논리는 「국내수요 위축 및 수출둔화-생산감소-국내수요 재위축」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데, 구조조정에 따른 자금압박 및 소비둔화가 심각해 경제여건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침체를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내수요 위축이 경제활성화의 걸림돌이고, 그래서 돈을 풀어서라도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적표



일견 보아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논리로 보아 틀림없을 것이다. 국내수요가 위축되고서는 생산이 활성화될 수 없고, 생산활성화가 안된 상태에서 경제를 호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출이라도 호조를 보인다면 내수위축을 커버할 수 있겠지만 원저에 엔고가 겹쳤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 상태에서 경제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내수진작정책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경부를 비롯한 재벌 선호세력 및 성장 제일주의자들은 인플레이션 성장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험하고서도 이를 간과하거나 평가절하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공업화정책 추진과정에서나 80년대 중반이후 산업 성장국면에서 「인플레를 통한 산업 및 경제성장-국민소득 향상-국내수요 진작-인플레 심화-경쟁력 하락」이라는 쓰디쓴 경험을 만끽한 바 있다. 인플레이션은 결코 진정한 성장정책이 될 수 없고, 결국에는 투자가 아닌 투기만을 유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경제를 멍들게 할 뿐이라는 것이다.

통화의 확대공급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 확실하고 일시적으로 산업생산을 활성화시킬지 모르겠으나, 결코 건전한 산업발전이나 경제성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재경부 등의 통화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여건 개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국내수요 위축이 경제여건 개선 및 산업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다분히 감성적인 진단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회의에서도 급격한 경기부양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면 자칫 경제가 회복불능상태에 빠져들 위험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그린벨트 재조정 및 준농림지에 대한 공장신축 허용 등 토지거래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나선 것은 어디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것같다. 토지거래 활성화는 산업생산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곧바로 인플레로 연결됨은 물론 비생산적 투기를 조장함으로써 또다시 경제를 구렁텅이로 빠뜨릴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플레 및 투기에 따른 거품으로 생산설비 및 소비가 30%정도 과잉이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오늘의 생산 및 소비위축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IMF의 원인을

정확히 재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Business Week이 최근 발표한 아시아 7개국의 경제성적표를 보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 금융개혁 및 정치개혁은 B를 받았으나, 기업 및 외국인 투자는 C와 C-를, 소비자 신뢰는 D를 받았다. 5대재벌들의 구조조정에 아무런 진척이 없고,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거품을 제거한 후 경기부양책을 써도 늦지 않다. 오늘의 일본이 대변해주고 있지 않은가?

<화학저널 1998/11/23.30>